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
정당명	국민의힘		
제 목	자유 주도 성장, 기업하기 좋은 나라	분 야	재정·경제·복지 국방·통일·외교통상 산업자원·건설교통
<input type="checkbox"/> 목 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본, 기술,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 실현 ○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‘자유 주도 성장’ 달성 ○ 규제 완화, 세제 정비,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, 일자리 창출 ○ 글로벌 경쟁력 강화, 신산업·신기술 성장 추진 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이행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 저해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 -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- 「자유경제혁신 기본법」을 제정하여 신기술·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, 미래산업 육성 -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-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: 인프라 조성, 세제 혜택, 보조금 등 ○ 기업하기 좋은 나라, 일하기 좋은 나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,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-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(IR) 개최 -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-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-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-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, 부담금 감면 등 우대 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이행 기간 : 취임 즉시 추진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재원 조달 방안 등 :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			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
정당명	국민의힘		
제 목	AI·에너지 3대 강국 도약	분 야	재정·경제·복지 교육·인적자원 산업자원·건설교통 과학기술·정보통신
<div>□ 목 표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 ○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○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 <div>□ 이행 방법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,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-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·연구비 지원 : 정부-민간 매칭 -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(문해력) 확산 ○ AI 유니콘 기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-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지원 ○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- 차세대 AI(차세대 GPU, NPU, HBM 등) 원천 기술 개발 지원 - 국내외 기업 주도 ‘AI 스타트업·벤처 성장 펀드’ 조성 - AI 유망 중소·벤처기업 등 발굴, 육성 ○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: 부처 간 조정, AI 규제 도입시 영향평가 실시 - AI 정책보좌관 신설, 민간전문가 위촉 - 데이터 규제 혁파,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 확대 - 기준국가제 적용으로 국내에만 있는 규제 폐지 			

○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

-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차질 없이 추진
- 한국형 소형원전(SMR)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 확보
-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시대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
- 산업용 전기료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,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
- 에너지 고속도로·국도·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
-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

○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·과학특임대사 신설

-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강국 구현
-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: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 통할
- 과학특임대사 신설 :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 부여

○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

-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 회복
-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 추진
-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통한 지원책 강화
-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

○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

-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
- ‘성실한 실패’ 연구 성과 인증제 도입
- 부총리 주도로 실질적인 연구·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

□ 이행 기간 : 2025년부터

□ 재원조달방안 등 : 국비 활용, 민간 투자 유치,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
정당명	국민의힘		
제 목	청년이 크는 나라,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	분 야	재정·경제·복지 교육·인적자원 산업자원·건설교통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○ 청년 취업, 주거, 교육, 결혼,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<p>□ 이행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 확대 보장 - 청년이 주도적으로 시작부터 결론까지 참여 -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못받을 걱정이 없는 연금재정 달성 -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검토 ○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- 청년들의 꿈을 실현 하는 창업 지원 -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에 조성 - AI 청년인재 20만명, 수출무역전문인력 10만명 양성 - 대학교육 혁신 : 기업연계 과정 확대, 현장교육 강화로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○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·3·3 청년주택 공급 : 결혼하면 3년, 첫아이 3년, 둘째 아이 3년,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여 청년 집 걱정 해결 - 청년, 신혼,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- 신생아 특례대출,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- 반값 월세존 조성,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-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- GTX 역사 주변, 공공유�휴부지에 통합기숙사 건립 			

○ **신혼부부 결혼 부담 완화**

-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 :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, 소비자 구제 장치 강화
-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 : 공공시설 예식장 인프라 조성 지원

○ **육아부부 부담 덜기**

-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 확대
-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
 - 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 비과세를 자녀 1인당 2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대
- 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 확대
- 출생 즉시 아동 이름으로 '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' 제도 도입
- 24시간 돌봄시설, 긴급돌봄 시설 확대
- 0세아와 보육교사 1:1 보육으로 안심 육아 구현

○ **청년 도약 지원**

- 대학생,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 확대
-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·도약계좌·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 상향

○ **군가산점제 도입**

-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
-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 도입
-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:
 - 군 직무 경력 기반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 도입
 - 민간 자격증과 연결된 군내 교육 기회 확대
 - 군복무 중 학점은행제 운영 확대

□ **이행 기간 : 2025년부터**

□ **재원조달방안 등**

- 국비 및 지방비 활용
- 기존예산 재조정,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
정당명	국민의힘		
제 목	GTX로 연결되는 나라, 함께 크는 대한민국	분 야	재정·경제·복지 산업자원·건설교통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국토 균형발전 촉진 ○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○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<p>□ 이행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‘전국급행철도망’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 도 권 GTX : A, B, C, D, E, F 노선 적시 개통 및 연장 추진 • 부 울 경 권 GTX : 울산~양산~김해~창원 • 대구경북권 GTX : 대구경북신공항~대구~영천~포항 • 충 청 권 GTX : 청주공항~청주~대전~세종 • 광주전남권 GTX : 광주~송정~나주~목포 ○ 광역철도,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역내 광역급행철도(GTX)·광역철도·도시철도 등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 - 교육·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- 문화·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유입 확대 ○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도권, 충청권, 호남권, 대경권, 동남권 성장기반 조성 ○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특구제도 통·폐합 후 지자체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 도입 -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동·기업·교육·세제 등 규제 완화 적극 수용 ○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계획, 산업, 조직·인사, 조세, 입법, 교육 관련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-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농지·산지·환경 분야의 지방 권한 확대 - 광역시·도, 특별자치도, 특별시, 50만 대도시, 시·군의 자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권한 이양 조정 -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-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			



□ 이행 기간 : 취임 즉시

□ 재원조달방안 등 : 민자 유치, 국비, 지방비, SOC 예산 재조정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
정당명	국민의힘		
제 목	중산층 자산증식, 기회의 나라	분 야	재정·경제·복지 산업자원·건설교통
<p>□ 목 표</p> <p>○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,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</p> <p>□ 이행 방법</p> <p>○ 중산층 감세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- 소득세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·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행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· 현행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· 현행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<p>○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- ‘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’ 제정으로 공정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-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(ETF) 허용 - 배당소득 분리 과세 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세제 지원 확대 : 납입한도 연 4,000만원, 비과세 한도 1,000만원으로 확대 <p>○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개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 -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- 현행 50%인 최고세율을 30%로 인하 - 현행 20%인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 - 가업상속을 위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 			

○ 생활물가 부담 완화

- K-원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
- 영·유아용품 및 식료품, 아동의류 면세
- 배추, 무 등 8대 노지작물, 사과, 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
- 농·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직거래 활성화

○ 부동산 제도 개편

- 각종 규제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(White Zone) 도입으로 민간주택시장 공급 확대
- 종합부동산세 개편, 양도소득세 종과세 폐지,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
- 재개발·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: 15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·재개발 신속 추진
-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

□ 이행 기간

- 취임 즉시 실시하여 임기 중 전 기간
-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

□ 재원조달방안 등 : 재정 소요 없음

-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
정당명	국민의힘		
제 목	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, 안심되는 평생복지	분 야	재정·경제·복지 교육·인적자원 보건·의료·환경 산업·자원·건설·교통
<input type="checkbox"/> 목 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 ○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 ○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 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이행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년·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, 내 집 마련 첫걸음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혼하면 3년, 첫째아이 3년, 둘째도 3년,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- 재건축·재개발 공공기여 수준 따라 청년·신혼 배정 비율 확대 -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(주택구입), 버팀목 대출(전세) 기간 연장 - 신혼부부 디딤돌·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 ○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난임생식세포 동결·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-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- 임신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-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 도입 -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 ○ 우리 아이 자산 형성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0~17세 ‘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’ 신설 - 취약계층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 지원 확대 ○ 디딤돌 소득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소득보장 확대 -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			

○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

- 고령자·청소년 독감, 어르신 폐렴구균, 65세 이상 대상포진, HPV 남성까지 지원,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(RSV) 예방접종 지원
- 도서·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 확대

○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

-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
-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,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
-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,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
-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

○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

- 정신장애, 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
-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 보장
-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

○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

-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재검토
-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
-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, 의대생 참여 보장
-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 구성

□ 이행 기간 : 2025년부터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
-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
- 국비, 지방비, 기금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
정당명	국민의힘		
제 목	소상공인,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	분 야	재정·경제·복지
<div>□ 목 표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○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○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<div>□ 이행 방법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“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”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,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○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응자 -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, 재기 지원 - ‘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’ 지원금 확대 ○ 서민·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민·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보·소진공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 금융 기능 통합 조정 -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-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-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○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, 맞춤형 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과금, 안전재해보험, 전기료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 - 고용보험, 산재보험 지원 확대, 관리비 투명화 지원 - 중·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부(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)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(1,000만원 한도, 6개월 무이자 등) 지원 			

- **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 예방**
 - 50세대 이상 오피스텔,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, 관리비 운영·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 보장
- **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, 디지털 마케팅 지원**
 -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
 -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제작 지원
 -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
- **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**
 -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
 -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 지원
 - 정부-카드사-지자체 연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
 - 디지털 기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
- **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**
 -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: 5.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
 -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및 교통 편의 시설 확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
 -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%에서 50%로 확대, 일몰기한 3년 연장

□ **이행 기간** : 2025년부터

□ **재원조달방안 등** : 재정 재조정, 국비, 지방비 활용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
정당명	국민의힘		
제 목	재난에 강한 나라,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	분 야	정치·행정·사법 보건·의료·환경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합·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 ○ 예측 → 대응 → 복구까지 전 주기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<p>□ 이행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사후 수습’에서 ‘사전 대비’로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난 대응 통합시스템으로 재난 유형별 관리 강화 -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기관 재난통합정보공유 플랫폼 확대 - AI, 빅데이터 기반 재난조사, 원인분석 등을 종합해 재난 위험지도 작성 - 다양한 복합재난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 구축 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확보 ○ 재난전문조직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드론,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전 방위적 재난 감시·모니터링 체제 강화 - 지자체 재난전담부서 전문화를 통한 각 지자체별 재난전담 조직 활성화 - 닥터 헬기, 소방 헬기 등 재난대응 장비 확충 ○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토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기후재난 통합조정권 기능조정 -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·도시계획 정책 강화 -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○ 정부, 지자체, 민간 정보공유 플랫폼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실시간 연계 - 민간과 협력한 조기 경보 체계 강화 -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 			

- AI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 개발, 주요 위험지점 사전 경고

○ 국가 항공 건설·운영체제 전면 개편으로 항공 안전 혁신

- 공항 건설·운영 주체 분리 및 안전관리 일원화
- 항공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(AISIS 2.0)
- 지방·도심 항공(UAM 포함) 통합안전 기준 정비
- 저비용항공사(LCC) 정비역량 강화, 고부가가치 항공 MRO 육성

○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싱크홀 대응 체계 구축

- 지반탐사관련장비(GPR 등) 지속 확충 및 기술개발 등 R&D 지원
- 지하공사와 지반탐사 관련 제도 개선
- 지반탐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

○ 하천지류 정비사업 신속 추진으로 자연재난 예방

- 도심지 하천 저류지 조성
- 대규모 준설 등 하천의 물그릇 확보
- 노후 제방 안전 강화

□ 이행 기간 : 2025년부터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정부 예산구조 혁신 및 안전 분야 투자 우선순위를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 확보
- 재난 안전 관련 기금 확충 및 중장기 재원 조달
- 첨단기술 R&D 투자 확대와 공공-민간 협력 모델 활용으로 재정 효율 제고
- 안정적 세수기반을 활용하며 미래 재난피해 경감을 통해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
정당명	국민의힘		
제 목	특권을 끊는 정부, 신뢰를 세우는 나라	분 야	정치·행정·사법 국방·통일·외교통상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치·사법·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 ○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<p>□ 이행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·임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 부처, 17개 시도,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- 기관장 눈치 보기, 제식구 봐주기,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 근절 ○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탄 국회 폐해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○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 감사제도 도입하여 투명성 확보 -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선관위 감사 근거 마련 ○ 공수처 폐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- 수사권은 검찰, 경찰로 이관 ○ 사법 방해죄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 방지 - 허위 자료 제출,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·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 			

○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,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

-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유출, 여론 조작, 심리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
-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연결 사회의 새로운 위협에 선제 대응 및 민·관·군·산·학 통합 방첩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

○ 간첩법(형법 제98조) 개정, '적국'에서 '외국'으로 범위 확대

- '적국' 중심에서 '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'으로 적용 범위 확대
- '군사상의 기밀' 외에도 '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(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, 외교적 협상 내용, 경제 전략 등)'를 명시적으로 포함
- 간첩죄 성립의 목적으로 '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'으로 명확히 규정
- 문화·학술·기술 교류 및 시민으로 위장한 간첩 활동을 간첩행위로 명시

☐ 이행 기간 : 2025년부터

☐ 재원조달방안 등 : 재원 소요 없음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
정당명	국민의힘		
제 목	북핵을 이기는 힘, 튼튼한 국가안보	분 야	국방·통일·외교통상
<p>□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○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‘강한 대한민국’, ‘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’, ‘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’ 구현 ○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 <p>□ 이행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- 한미 핵·재래식 통합(CNI) 훈련을 내실화 - 한미방위조약에 ‘핵공격 보호조항’ 추가 추진 ○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축,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의 ‘발사의 왼편작전 (Left of Launch)’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 - 2축,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‘스카이돔’ 체계를 구축하고,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 - 3축,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 ○ 핵 잠재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 -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○ 북한의 핵위협 가중시, ‘전술핵 재배치’ 또는 ‘NATO식 핵공유’를 한미간 협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, 통제 및 운영 능력 사전 준비 - 미국이 전술핵을 괄에 배치한 후 ‘한국 보호용’으로 운용하는 방식 검토 			

○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

-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

○ ‘사이버전자전사령부’ 창설

-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모체로 단일 지휘체계 구축

○ ‘글로벌 K-방산’ 육성하여 세계 시장 진출

- 법적, 제도적, 금융적 지원을 확대
- ‘10대 국방첨단기술’ 선정 집중 육성으로 선진 강군 구현

○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, 헌신에 합당한 대우 실현

- 예비군 수당 현실화
-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 장병 급식 품질 개선
- 전투효율성을 위해 군 장비·보급품의 품질 향상
- 초급간부 처우 개선
 - 간부사관 제도 확대를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 확충
 - 각종 수당 현실화

○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을 확대

□ 이행 기간 : 2025년부터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- 국방 예산 혁신 및 재조정을 통해 첨단 역량 강화에 투자
- 국가안보 및 장병 복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부 예산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을 확보